2018 기획연구과제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전략산업육성 분야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연구책임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최승훈 지역경제연구실 초빙연구원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는 1999년 「인천산업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자체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산업정책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산업정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3)이 수립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인천시 민선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시정목표의 하나로 제시

– 민선정부마다 경제, 복지, 환경 등 우선순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주요시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사함.

○ 90년대 후반 이후 인천시의 지역산업정책은 산업집적화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그간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시행되어왔지만, 이들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역산업정책이 자율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시기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지역경제 기여도와 해당 전략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동안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각종 지역통계는 물론 연도별 시정백서와 경제관련 부서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역 경제적 성과를 검토함.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시기별 취약점과 이슈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국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개요

중앙부처 및 인천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개요

○ 우리나라의 60, 70년대 압축적 발전과정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80년대부터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함.

– 1998년 이전 시기의 지역정책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있는 수도권에서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산업단지의 조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였으나, 지역의 자율성 측면에서 이 시기에는 지역 자체적인 산업육성정책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음.

○ 90년대 후반 중앙정부 주도의 특정지역 중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점차 분권적 · 상향식의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도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5대 핵심시책 중 하나로, 지역혁신역량 기반구축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함.

–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약 5조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와 예산이 마련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갖춤.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4대 지역전략산업 선정(1999년)을 시작으로 4+9개 시도지역산업진흥사업(2002년)과 5+2 광역권경제개발사업 등 정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음.

○ 수도권인 인천시는 1999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 배제되면서, 독자적인 지역산업정책의 출발이 다소 늦어졌으나, 2003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2004~2008)」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 인천시 민선정부별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면, 민선3~4기 때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북아 또는 세계일류를 목표로 첨단도시, 국제도시를 지향하였던 반면, 민선5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를 강조하였고, 민선6기 때는 시민의 행복을 표방

– 인천시의 민선정부별 시정 비전과 목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 인천광역시 정부별 비전 및 전략

	민선3기 (2002~2006)	민선4기 (2006~2010)	민선5기 (2010~2014)	민선6기 (2014~2018)
비전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 건설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미션	• 거버넌스 경영 • 사회자본 강화 • 펜타포트(Penta-port) • 자원봉사 종합구축 • 균형적 도시재생	미래를 여는 컴팩· 스마트 도시 구현	• 도약하는 인천경제 • 균형있는 동반성장 •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 소통하는 시정혁신 •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전략 · 목표	• 복지도시 실현 • 문화도시 창조 • 환경도시 지향 • 지식도시 구현 • 국제도시 건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경제 •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실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준비하는 열정 있는 도시건설	•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교육과 복지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	• 풍요로운 시민의 삶 • 역동적인 세계도시 • 인천만의 가치창조 • 시민중심 시정실현

○ 인천시 민선정부별로 지역전략산업 전담 행정조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민선3기는 경제통상국 산하에 4개 과를 두고 있으며, 민선4기에는 '에너지정책과'를 추가하여 5개 과로 확대·개편하였음.

– 민선5기 정부는 기존 경제통상국을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경제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음. 경제수도추진본부에는 7개의 과를 두고, 투자유치담당관실과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였고, 기존 과학기술과는 폐지한 반면, 신성장동력과를 대체·신설하여 에너지정책과 사무와 병합하여 담당하도록 하였음.

– 민선6기 정부는 인천시민 300만 시대에 맞추어,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전담조직을 한층 확대하면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폐지하고,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의 2개 국을 신설함. 에너지정책과를 부활시켰고,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였음.

○ 민선3기 이후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전담부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전담업무도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에너지, 농축산유통, 과학기술 및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창업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관련 광범위한 사무를 담당

인천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분석 틀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책 개선방안과 보다 효과적인 정책발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기업의 성과로 발현될 것이고, 최종적인 성과는 지역전략산업과 클러스터의 성장,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됨.

– 따라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거시적 성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해당 산업별 성과의 두 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도 지역경제 기여도와 산업성장 성과의 두 개 측면에서,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또한, 연구목적이 유사한 일부 선행연구의 평가지표를 종합하고 유형화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음.

〈표 2〉 지역전략산업 성과 평가지표

부문		지표	비고
일반현황(공통)	기업	GRDP 비중(전국대비)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전산업 사업체 수/종사자 수 비중	상동
		제조업 사업체 수/종사자 수 비중	상동
	기반	계획입지 면적 비중	상동
		외국계 기업 수(누적)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혁신	특허 출원 수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신규기업 수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기술	국가R&D 매칭투자액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국가R&D 기술료 징수액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업종별	산업규모	사업체 수	전산업 대비 비중 및 증가율
		종사자 수	상동
	성장성	매출액(또는 생산액) 증가율	전산업 대비 비중 및 증가율
		영세기업(5인 이하) 비중	전산업 대비 비중 및 증가율
	특화도	사업체 수 입지계수	전국 대비 특화도 및 증가율
		종사자 수 입지계수	전국 대비 특화도 및 증가율
		매출액(또는 생산액) 입지계수	전국 대비 특화도 및 증가율

○ 한편,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크게 기반구축, 혁신환경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반구축은 클러스터 조성과 각종 공통기반시설 도입을 의미하며, 혁신환경은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킹 및 연구개발 등 혁신환경 기반조성과 관련이 있음. 또한, 기술개발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 성과를 의미하며, 인력양성은 대학 및 전문대학뿐 아니라, 각종 직업학교와

고용을 통한 기업 내부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포함하고, 기업지원은 각종 기업지원 사업의 투입과 성과를 의미함.

○ 한편, 시기마다 지역전략산업이 다양하여, 모든 과거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민선3기에서 6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시기별 전략산업을 종합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물류, 자동차, IT, BT, 로봇산업 정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 온 지역전략산업으로 파악됨.

Ⅲ. 성과분석

○ 시정부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평가지표에 따라 지역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적으로 민선정부별 주요사업과 예산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

– 우선,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와 전략산업별 성과를 분석

– 다음으로, 민선정부별 주요사업과 예산규모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단계에서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시기별 주요이슈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성과지표 분석

○ 성과지표에 따른 분석 결과, 민선정부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하기 어려우며,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인 성장세에 못 미치거나, 산업별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차와 로봇산업은 완만한 감소추세에 있고, 바이오산업은 대기업의 유치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2009년까지 크게 성장한 이후 종사자를 제외한 사업체와 매출액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물류는 전통적인 전략산업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비해 생산액 증가율이 낮아, 영세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IT·SW산업은 성장의 정체와 함께 지역 특화도도 낮은 수준임.

– 결국 지금까지 인천시의 산업육성정책은 최소한 5개 전략산업에 한해서만큼은 그다지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전통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축소와 신성장산업인 로봇과 바이오산업의 성장세 정체는 향후 인천시의 미래먹거리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

– 물류 외에 자동차와 바이오 및 로봇산업의 지역 특화도가 비교적 높지만, 점차 하락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임. 혁신클러스터의 집적정도가 어느 정도 임계규모에 도달하면 자생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 공통지표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읽을 수 있는데, 연구개발 및 인프라와 투입 측면의 지표들인 계획입지 면적 비중, 외국계기업 비중, 국가R&D사업 지방정부 매칭비 비중, 기술료 징수액 비중, 특허출원 비중 등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인천시의 제조업 비중은 물론 전산업 평균 비중에도 크게 부족함.

– 외국계기업 및 신규기업 비중의 정체는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및 창업 활성화 노력에 비해 특히 최근 들어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상기 대부분 평균 이하의 지표에서 인프라를 나타내는 계획입지 면적 비중을 제외한 연구개발, 기술료, 특허 등 대부분 소프트웨어적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내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

– 다른 측면에서, 수평적, 수직적 협업환경이 갖추어지기에는 아직까지 집적정도가 미흡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별 지역 특화도의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결국 물리적 집적지 조성전략에서 더 나아가, 집적지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며, 더불어 기업유치 및 창업정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집적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석

○ 민선정부별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음.

– 민선3~4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더불어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들도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임.

– 민선5기는 창업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강조하면서, 원도심 인프라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시기

– 민선6기는 이전 정부의 인프라를 토대로 기업유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창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강조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시기별 경제산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들이 완료되면서 인프라 사업이 줄어들어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규모 비중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민선3~4기에는 2009~2010년의 2개년도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2005~2008년 사이의 금액규모를 보면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민선5기에도 비슷한 규모이지만 인천시 전체 예산규모의 확장으로 비중은 다소 낮아지거나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당시 로봇랜드 공공시설 인프라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 민선6기의 경제산업 분야 예산규모는 더 줄어들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시기 대형 인프라 사업이 없었다는 점과 시의 재정적자 해소에 집중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적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실질적 감소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Ⅳ. 종합분석

○ 성과평가 지표분석과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정성적 검토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시기별 강약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성과지표 분석과 사업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전략산업 정책분야별로 시기별 취약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는 정책실무자(3명), 교수(2명), 연구자(3명), 시민단체(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 설문은 기반구축, 혁신환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의 5개 부문에 대해 예산, 적정성, 성과의 3개 차원을 시기별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3〉과 같음.

〈표 3〉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민선3기 (2002~2006)				민선4기 (2006~2010)				민선5기 (2010~2014)				민선6기 (2014~2017)				전체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기반구축	3.5	3.7	3.5	3.6	3.6	3.5	3.6	3.6	2.6	3.0	2.9	2.8	2.9	3.2	3.4	3.2	3.3
혁신환경	3.2	3.2	3.2	3.2	3.4	3.3	3.6	3.4	2.7	2.5	2.8	2.7	3.5	3.6	3.4	3.5	3.2
기술개발	2.9	3.1	2.9	3.0	3.3	3.3	3.3	3.3	2.7	2.6	2.4	2.6	2.9	3.0	3.1	3.0	3.0
인력양성	2.6	2.9	2.6	2.7	3.0	3.1	3.0	3.0	2.9	3.1	2.8	2.9	3.0	3.0	2.9	3.0	2.9
기업지원	3.3	3.2	3.3	3.3	3.1	3.0	3.1	3.1	3.2	3.3	3.1	3.2	3.0	3.3	3.5	3.3	3.2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은 기반구축과 기업지원, 혁신환경은 양호한 반면, 기술개발, 인력양성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

– 기반구축 부문도 갈수록 소폭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민선5기 외국계기업 수의 마이너스 성장은 기업유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누적으로는 외국계 기업과 신규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업 사업체 수 비중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유치와 함께 지역 이탈 기업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최근 조성된 클러스터가 아직까지 자생적인 집적 활성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거나, 전국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최고수준의 투자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수의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클러스터의 임계규모에 도달할 시점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혁신환경은 중간수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R&D 등 소프트웨어적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주로 인프라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나마 인력양성 부문은 최근 민선6기의 전산업 종사자 수가 다소 증가하여, 고용이 개선됨으로써 성과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기술개발 부문은 상당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독자적인 R&D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유치된 글로벌대학캠퍼스 및 연세대 국제캠퍼스, 해외 R&D 센터 등 혁신자원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혁신 수준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Ⅴ. 개선방안

혁신지원 시설의 확충과 효과적 운영

○ 지역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항만 배후단지 등 물리적 인프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음.

– RFID/USN센터, BIO산업 지원센터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미흡하거나, BIT-PORT 사업의 중단, 로봇랜드 사업의 무기한 지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의 중단, 다소 지지부진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 클러스터내 혁신환경을 촉진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여러 원인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거의 없어, 당초 계획에 비해 혁신지원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 항공, 첨단자동차, IT 등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및 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공통기반시설이 확충되거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충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앵커기업과 연관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초창기에 해외 기업유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에 비해, 최근 다소 주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전략산업의 특화도도 오히려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내 클러스터의 집적도는 임계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IT산업 등은 동종업종을 중심으로 한 앵커기업 유치를 강화해야 하고, 이미 앵커기업이 일부 입지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도 앵커기업의 집적도를 높이거나, 가치사슬에 따른 수직적 집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지원해야 함.

– 또한,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 산업은 기존 연구개발 시설과 연계한 첨단제조시설의 입지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사회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충 및 R&D 투자확대

○ 산학연 촉진을 위해서는 공통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조달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협력에 대한 동기 확충이 매우 중요함.

– 인천지역은 혁신을 주도할 지역대학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대학캠퍼스를 조성하였으나, 이들 대학의 활용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

– 이들 캠퍼스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은 물론 대학과 지역 기업간 협력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지원기관의 중개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한편, 산학연 참여주체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산학연 협력 활동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글로벌 혁신환경 및 문화 확산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시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자처해 왔으나, 그나마 가장 진전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에서 조차도 임상 및 부품소재 등 연구개발 관련 시설과 전문인력의 부족, 중소기업 연계 부족 현상이 여전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동종업종의 집적도가 향상되어 수요가 증가하면, 점차 해소될 부분이기는 하나, 단기간 제한된 토지에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교하게 의도된 유치전략이 필요함.

○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환경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고급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어우러져야 가능

차 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 5

Ⅱ 국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개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9
2. 인천광역시 ····· 12
3. 인천광역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 분석틀 ····· 17

Ⅲ 인천광역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분석

1. 성과지표 분석 ····· 27
2. 사업분석 ····· 37

Ⅳ 주요 성과와 개선방안

1. 종합분석 ····· 47
2. 개선방안 ····· 52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59
2. 정책제언 ····· 61

참고문헌 ····· 67
[부록 I] 지역전략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매칭 ····· 68
[부록 II]「인천광역시 민선정부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 분석」····· 76

표 차례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 5
<표 2-1> 인천광역시 민선정부별 비전 및 전략 ····· 13
<표 2-2> 민선 시정부별 전략산업 ····· 20
<표 2-3> 선행연구의 지역전략산업 성과 평가지표 ····· 21
<표 2-4> 지역전략산업 성과 평가지표 ····· 24
<표 3-1> 인천시 전략산업육성 부문 공통지표 현황 ····· 28
<표 3-2> 인천시 자동차산업 지표 현황 ····· 31
<표 3-3> 인천시 로봇산업 지표 현황 ····· 32
<표 3-4> 인천시 바이오산업 지표 현황 ····· 33
<표 3-5> 인천시 물류산업 지표 현황 ····· 34
<표 3-6> 인천시 IT · SW산업 지표 현황 ····· 35
<표 3-7> 인천광역시 민선3기(2002~2006)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 38
<표 3-8> 인천광역시 민선4기(2006~2010)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 39
<표 3-9> 인천광역시 민선5기(2010~2014)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 40
<표 3-10> 인천광역시 민선6기(2014~2017)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 41
<표 3-11>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 예산규모 추이 ····· 43
<표 4-1>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48
<표 5-1> 인천광역시 민선7기 선거공약의 주요 내용 ····· 62
<표 5-2> 인천광역시 민선7기 경제·산업 관련 주요 공약 ····· 63

그림 차례

<그림 2-1> 민선3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 14
<그림 2-2> 민선4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 14
<그림 2-3> 민선5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 15
<그림 2-4> 민선6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 16

I

서 론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60, 70년대 압축적 발전과정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80년대부터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함.

–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 당시 중앙정부 주도의 특정지역 중심 개발전략은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킴.

–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불균등 성장이 국가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함.

○ 그러나 90년대 후반 경제의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점차 제한되고, 지역단위의 역량이 강조되면서 지자체가 경제활동의 핵심축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도 자연스럽게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 1998년 이전 시기의 지역정책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있는 수도권에서 공장, 대학 등과 같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였던 시기임.

–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5대 핵심시책 중 하나로 지역혁신역량 기반구축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함.

– 이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4대 지역전략산업 선정(1999년)을 시작으로 4+9개 시도지역산업진흥사업(2002년)과 5+2 광역권경제개발사업 등 정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음.

○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1999년 「인천산업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자체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지역산업정책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산업정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을 전후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003년에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2004 ~ 2008)」이 수립되면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였음.

–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계획(2005)은 혁신클러스터 개념을 토대로 IT·BT, 비즈니스 서비스, 물류, 관광 등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유치 전략을 제시하였음.

– 2015년에는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8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육성방안을 제시함.

○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3)이 수립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각 민선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제시

– 민선정부마다 경제, 복지, 환경 등 우선순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주요시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사함.

–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왔음.

○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인천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은 산업집적화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이견이 없는 반면, 개별 정책사업의 적정성 및 성과 측면에서는 긍정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이 혼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도 민선정부별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이들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역산업정책이 자율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광역시의 시기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지역경제 기여도와 해당 전략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검토하고,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각종 지역통계는 물론 연도별 시정백서와 경제관련 부서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역 경제적 성과와 문제점 등을 검토함.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시기별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정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민선3기에서 최근 민선6기에 이르기까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지역경제 기여도와 산업성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기별 주요사업과 예산규모를 통해 내용적 검토를 병행함.

–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표적집단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기별 강점과 약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먼저, 제2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변천사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함.

–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분석방법론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통해 시기별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주요사업과 예산규모를 검토함.

– 또한, 제4장에서는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강점과 약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제5장은 상기 분석결과 및 정책 개선방향과 연계하여 민선7기의 경제산업 분야 공약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고 있음.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항목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방법
분석방법론 도출	지역산업정책 변천사 및 현황 검토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산업정책 현황 (제2장 1절) • 인천시 현황(제2장 2절)	• 선행연구 조사 - 선행연구 - 사업계획
	기존 분석방법론 검토 및 대안 제시	• 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 분석방법론 검토 (제2장 3절) • 분석방법론 제시(제2장 3절)	• 선행연구 - 논문 및 보고서
정책성과 분석	성과분석	• 통계자료를 통한 성과분석(제3장 1절) • 주요사업 및 예산 검토(제3장 2절)	• 통계자료 분석 • 선행자료 분석 - 각년도 시정백서 - 각년도 부서별 사업계획 등
	종합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시기별 성과 및 문제점 분석(제4장 1절)	• 전문가 설문조사
정책대안 제시	개선방안 제시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개선방안 제시 (제4장 2절) • 민선7기 공약 검토 및 제언(제5장 1절)	• 자문회의

Ⅱ

국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개요

Ⅱ. 국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개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전략산업의 개념

○ 전략산업은 가까운 미래에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분히 편의적이며 직감적인 용어로서 미래 유망산업, 미래 성장산업, 신성장산업, 신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유사용어와 함께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유영성 외, 2012).

– 미래의 의미도 특정한 시간적 한계로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 반면, 전략산업과 달리 주력산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산업과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현재적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용어로서, 산업육성을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기 위하여 지역주력산업 또는 지역연고산업 등으로 사용하기도 함(유영성 외, 2012).

○ 선행연구를 통해 전략산업 또는 유사용어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정지원 외, 2015).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창걸 외(2004)는 '미래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보고서에서 미래 선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여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하며, 시장성 및 수익성을 동반한 사업성이 높고 기술경쟁력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

– 박중구(2003)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에서 성장동력산업을 현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주력기간산업군, 기술혁신을 통해 새롭게 등장할 미래유망산업군, 제조업과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으로 분류하기도 함.

– 전자부품연구원(2008)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전략산업을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효과나 기술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나 기술 또는 기존 성장동력 산업이나

상용화 초기단계의 사업에서 향후 5년간 수출 및 투자 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

- 또한, 지식경제부(2011)는 'K-NANO 전략 2020' 보고서에서 '미래 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통해 지난 5년 이상 연구개발을 추진해 온 첨단기술 분야 중 향후 5~10년 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수요창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상기 선행연구에서의 전략산업 및 유사용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전략산업은 가까운 장래에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신산업 혹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전개과정

○ 우리나라의 60, 70년대 압축적 발전과정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80년대부터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함(정지원·최종화, 2016).

- 국가 차원에서 특정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집중 육성한 것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시초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60, 70년대 중앙정부 주도의 특정지역 중심 개발전략은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불균등 성장이 국가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을 도입
- 그러나 90년대 경제의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점차 제한되고, 지역단위의 역량이 강조되면서 지자체가 경제활동의 핵심축으로 등장하기 시작

○ 90년대 후반 중앙정부 주도의 특정지역 중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점차 분권적·상향식의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도 수도권 진입규제 정책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함(조연술, 2012).

- 1998년 이전 시기의 지역정책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있는 수도권에서 공장, 대학 등과 같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산업단지의 조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였고,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는 지역 자체적인 산업육성정책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5대 핵심시책 중 하나로, 지역혁신역량 기반구축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함.

– 90년대 후반 이후 대표적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방기술 혁신사업,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산업집적화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 집적효과 등을 극대화시켜 지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김대중·김태진, 2014).

–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토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지역전략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강화됨(인천광역시, 2015a).

○ 지역전략산업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99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류승한·서연미·이윤석, 2013).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대구, 부산, 경남, 광주의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인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1년 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 등 3대 권역을 추가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2001년까지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사업기획, 집행 및 평가 등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고,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9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부터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의 자율성이 강화됨으로써 지역산업정책의 기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약 5조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와 예산이 마련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갖춤.

–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외에도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RIS) 등 혁신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MB정부에서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RRI), 지역혁신센터 조성사업(RIC), 광역선도산업 육성사업 등이 추진됨.

○ 이와 같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4대 지역전략산업 선정(1999년)을 시작으로 4+9개 시도지역산업진흥사업(2002년)과 5+2 광역권경제개발사업 등 정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음.

– 최근에는 2013년부터 '신지역 특화산업'을 3년 계획으로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주력산업, 협력산업, 연고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광역시

○ 수도권인 인천광역시는 1999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산업정책의 출발이 다소 늦어졌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산업전략이 포함되기 시작함.

– 1986년과 2000년 7월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용지가 계획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 영종·용유·무의지역의 항공물류·레저 중심지, 청라지구의 위락·금융중심지 계획이 반영됨으로써,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당시 산업전략이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으로 보기에는 지자체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이나 개발계획에 치우친 점 등에서 한계가 있음.

○ 인천시의 본격적인 지역산업정책은 2003년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2004~2008)」이 수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 1999년 인천산업진흥5개년계획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기보다 중앙부처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3)은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계획(2005)은 혁신클러스터 개념을 토대로 IT·BT, 비즈니스 서비스, 물류, 관광 등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유치 전략을 제시하였음.

– 또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2006), 「인천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2010) 등이 발표되었고, 「업종별 산업육성 추진전략」(2013)이 인천시 주도로 수립되기도 하였음.

– 2015년에는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8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육성방안을 발표함.

– 당시 8대 전략산업은 ① 미래 전략산업(첨단자동차, 항공, 로봇), ②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바이오, 물류, 뷰티), ③ 지역인프라 활용(관광, 녹색기후금융) 등의 세 가지 유형에 8개 산업을 선정

○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3)이 수립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매 민선정부별로 시정 미래비전과 전략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포함

– 민선정부마다 복지, 환경, 경제 등 우선순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주요시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음.

– 2002~2006년의 민선3기에는 '지식도시 구현'을 5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선4기에는 지역경제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화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경제'가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됨.

– 민선5기에서는 '도약하는 인천경제'와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의 지역경제관련 항목이 5개의 미션에 포함되었고, 민선6기에는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의 2개 목표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

〈표 2-1〉 인천광역시 민선정부별 비전 및 전략

	민선3기 (2002~2006)	민선4기 (2006~2010)	민선5기 (2010~2014)	민선6기 (2014~2018)
비전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 건설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미션	• 거버넌스 경영 • 사회자본 강화 • 펜타포트(Penta-port) • 자원봉사 종합구축 • 균형적 도시재생	미래를 여는 컴팩· 스마트 도시 구현	• 도약하는 인천경제 • 균형있는 동반성장 •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 소통하는 시정혁신 •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전략·목표	• 복지도시 실현 • 문화도시 창조 • 환경도시 지향 • 지식도시 구현 • 국제도시 건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경제 •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실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준비하는 열정 있는 도시건설	•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교육과 복지 강화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	• 풍요로운 시민의 삶 • 역동적인 세계도시 • 인천만의 가치창조 • 시민중심 시정실현

○ 한편, 인천시 민선정부별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면, 민선3~4기 때는 동북아 또는 세계일류를 목표로 첨단도시, 국제도시를 지향하였던 반면, 민선5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를 강조하였고, 민선6기 때는 시민의 행복을 표방하였음.

– 민선3기가 문화·환경·복지를 두루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민선4기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등장하였고, 이는 민선5기까지 이어지고 있음. 반면, 민선6기는 시민, 행복, 가치 등이 강조되고 있음.

– 또 다른 측면에서 민선3~4기에는 환경도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도시 인프라와 사회자본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선5기는 경제, 민선6기는 시민행복을 강조하고 있어, 시정의 변화추이를 인식할 수 있음.

○ 지역전략산업 전담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민선3기는 경제통상국 산하에 4개 과를 두고 있으며, 민선4기에서는 '에너지정책과'를 추가하여 5개 과로 확대·개편하였음.

– 민선3기 때인 2003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함으로써 투자유치본부를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인천시 전반의 투자유치 사무를 관장하기도 하였음.

– 민선4기 때는 경제정책과를 경제고용과로 개편하여 일자리를 강조하였으며, 에너지정책과를 추가함으로써 에너지를 소비뿐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그림 2-1〉 민선3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그림 2-2〉 민선4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 민선5기 정부는 기존 경제통상국을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확대·개편하여, 경제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음.

– 경제수도추진본부에는 7개의 과를 두고, 경제정책, (중소)기업지원뿐 아니라 투자유치 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는 별도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여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였음.

– 기존 민선4기의 과학기술과는 폐지한 반면, 신성장동력과를 대체·신설하여 에너지정책과 사무와 병합하여 담당하도록 하였음.

– 전반적으로 지역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사무가 강조된 반면, 과학기술 및 에너지 관련 사무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3〉 민선5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 민선6기 정부는 인천시민 300만 시대에 맞추어,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전담조직을 한층 확대하면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폐지하고,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의 2개국으로 확대함.

– 투자유치산업국은 민선3기 및 4기의 경제통상국과 유사한 형태이며, 에너지정책과를 부활시키고,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 농축산유통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일자리경제국은 기존 민선5기의 일자리창출과를 확대하여, 일자리는 물론 창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도록 함.

– 특히,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였음.

○ 민선3기 이후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전담부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전담 업무도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에너지, 농축산유통, 과학기술 및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창업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관련 광범위한 사무를 담당

– 비전 및 전략과 조직구성만으로 당시 민선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과단위 조직이 추가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민선3기와 4기 때는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이 강조되었고, 민선5기에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민선6기는 창업 및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그림 2-4〉 민선6기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 전담조직

3. 인천광역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 분석틀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책 개선방안의 도출과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자들간 이견이 없는 반면, 정책사업의 적정성 및 성과 측면에서는 긍정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이 혼재하고 있음(조연술, 2012).

– 국가차원의 연구에 비해 지역차원의 미시적인 산업정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그나마 일부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특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정책사업의 투입대비 성과를 검증하는데 그침.

○ 일부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대중·김태진(2014)은 충청남도의 4대 전략산업의 집적효과와 지역경제성장의 연관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박상옥 외(2013)는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적정성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효용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보완점을 제안하였음.

– 또한, 김영수 외(2007)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정량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비교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성, 생산성, 혁신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강영주(2011)는 대전의 IT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조연술(2012)은 4대 전략산업의 효용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류승한 외(2013)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입지특성의 변화추세와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연호·조택희(2014)는 전략산업이 충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산업간 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IT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2018)는 서울시의 정책방향, 미래성장가능성, 창조경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6대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각 산업의 규모, 성장추이, 규모의 영세성, 특화도, 창업률 등의 지표를 분석함.

○ 본 과제는 지역산업정책이 자율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광역시 민선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따라서 민선3기가 출범한 2002년부터 민선정부별 지역전략산업을 검토하여 공통산업을 대상으로 시기별 성과를 검토함.

–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상기 선행연구 가운데 명시적으로 지표를 제시한 일부 선행연구의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사지표는 통합한 후 자료획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지표를 활용함.

– 민선3기(2002~2006), 민선4기(2006~2010), 5기(2010~2014), 6기(2014~2018)의 각 시기별 성과를 임기만료 직전 해를 기준으로 2005, 2009, 2013, 2017년 등 4년을 주기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2017년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일부가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2005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제8차 개정에 따른 것이어서, 결국 2006, 2009, 2013, 2016를 기준으로 각 민선정부의 성과를 검토하고자 함.

1) 대상 전략산업의 범위

○ 인천광역시는 그간 시기에 따라 또는 민선정부별 전략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에 변화가 있었지만, 지역의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데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민선3기, 4기인 2010년 이전에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3),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3),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계획(2005) 등에서 IT, BT, 물류 등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제시됨.

– 민선5기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차원의 종합계획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2025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2012)을 참고하였음.

– 민선6기에는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2015)을 통해 항공, 첨단자동차, BT, 로봇 등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육성전략을 발표함.

– 이와 같이, 초기에는 IT, BT,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등 지역의 주력기반산업이 중심이었다면, 2015년에는 항공, 첨단자동차, BT, 로봇, 뷰티 등으로 미래 지향적이면서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지역전략산업은 시기마다 다양하여, 시기별 전략산업 모두를 대상으로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민선3기에서 6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지역전략산업을 추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 민선3기에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3)에 따라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및 정보통신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제시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3)에서 특정 전략산업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유치 부문에서 공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의 집적과 IT, BT를 중심으로 한 R&D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향하였으므로 물류, IT, BT산업을 경제자유구역의 중점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조는 민선4기에서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을 「2009 시정발자취」(2009)를 통해 인식할 수 있음.

– 민선5기에는 지역전략산업을 새롭게 선정하기보다 기존 전략산업을 유지하되, 2025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2012)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나노산업 등 첨단산업과 마이스, 금융 등 지식서비스 업종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강조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등 개별사업 위주의 전략업종 선정 전략을 구사함.

– 민선6기 시정부는 2015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망라하여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였음. 이들 가운데 제조업을 포함한 업종은 항공, 첨단자동차, 바이오, 로봇, 뷰티, 물류의 6개 업종임.

– 다만, 로봇산업은 민선5기에 들어서야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민선4기인 2005년부터의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2007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민선4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IT산업은 민선6기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타 산업의 기반산업이라는 개념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IT산업은 여전히 지역전략산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물류, 자동차, IT, BT, 로봇산업 정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 온 지역전략산업으로 파악됨.

– 아래 〈표 2-2〉는 민선정부별 전략산업을 종합한 것임.

– 본 과제에서는 이들 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성과를 검토하도록 함.

〈표 2-2〉 민선 시정부별 전략산업

구분	선행연구	전략산업
민선3, 4기 (2002~2010)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3), 2009 시정발자취(2009)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3)	IT
		BT
		NT
민선5기 (2010~2014)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2012)	IT·SW
		BT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로봇
		나노
민선6기 (2014~2017)	인천 미래 성장동력 :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2015)	항공
		첨단자동차
		바이오
		로봇
		뷰티
		물류

2) 평가지표의 선정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outcome)는 일차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기업의 성과로 발현될 것이고, 최종적인 성과는 지역전략산업과 클러스터의 성장,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됨(김영수 외, 2007).

– 상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거시적 성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해당 산업별 성과의 두 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 기업의 가시적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도 많으나, 본 과제의 연구목적과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와 산업성장 성과의 두 개 측면을 포함하여,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도록 함.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목적이 유사한 일부 선행연구의 평가지표를 종합하고 유형화하여, 최종 지표를 도출하도록 함.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평가방법론 자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대부분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된 임의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행연구의 평가지표들을 살펴보면,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등 지표의 유사성이 존재하며, 특히 성장성, 특화도 측면의 지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

〈표 2-3〉 선행연구의 지역전략산업 성과 평가지표

	선행연구	평가부문	평가지표
1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2007)	성장성	• 고용 증가율
			• 자본 STOCK 증가율
			• 변이할당분석(부가가치 기준)
		생산성	• 노동생산성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혁신성	• 혁신활동 수행 기업 수
			• 혁신 유형별 기업체당 혁신 건수
			• 제품혁신 개발주체 비중
			• 외부로부터 새로운 기술 획득 경험 기업 수
			• 타 조직과 협력적 혁신활동 경험 유무
			• 혁신을 위한 정보원천 중요도
2	6대 전략산업의 특징, 서울공공데이터(2018)	산업규모	• 사업체 수 및 비중
			• 종사자 수 및 비중
		성장추이	• 사업체 지수
			• 종사자 지수
		규모의 영세성	• 5인 미만 사업체 수 및 비중
		특화도	• 사업체 수 입지계수
			• 종사자 수 입지계수
		창업률	• 창업 사업체 수 및 비중
3	충북지역 산업구조와 전략산업 발전전략,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14)	-	• 실질 생산액 및 비중
			• 종사자 수 입지계수
			• 중간투입액 비중
			• GRDP 및 연평균 증가율
			• 생산유발계수
4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정책 방안, 국토교통부(2013)	-	• 종사자 수 입지계수
			•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 고용증가량 및 고용증가율
5	대전 전략산업 육성의 성과와 과제, 대전발전연구원(2011)	성장성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매출액 성장률
		특화도	• 사업체 수 입지계수
			• 종사자 수 입지계수
			• 매출액 입지계수
		산업연관효과	• 영향력 계수
			• 감응도 계수
		기여도	• 매출액 변이할당 분석
			• 고용자 수 변이할당 분석

○ 〈표 2-3〉은 유사한 연구목적을 갖는 선행연구들 가운데 명시적으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나 보고서의 평가지표를 종합한 것임.

– 지역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는 특정산업이 아닌 지역전반(공통)을 대상으로 GRDP 증가율, 고용 및 생산액 증가율, 혁신성 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음.

–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산업규모, 성장성, 특화도 등의 부문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및 매출액 관련 지표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정책 지원사업의 부문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크게 기반구축, 혁신환경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산업연구원, 2007).

– 기반구축 부문은 클러스터 조성과 각종 지원시설 도입을 의미하는데, 산업단지와 지원시설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연도별 평가에서 해당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편차가 클 수 있어, 성과지표로서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기반구축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계획입지 면적(비율), 유치기업 수(고용인력 수), 특화도(LQ)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또는 산업별 기반구축 정도를 살펴보도록 함.

– 혁신환경 부문은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킹 등 혁신환경 조성을 의미하는데,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STEPI의 혁신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문조사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며, STEPI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사 표본수가 작아 지역별로 세분하면 지표로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음. 따라서 창업기업 비율, 특허 출원 수, PCT 출원 수[1] 등 대체지표를 통해 해당 지역의 네트워킹 성과를 살펴보도록 함.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자료는 업종별 통계 확보가 어려워 신규기업 수로 대체하여, 공통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특허 및 PCT 출원 수도 세부 산업분류코드별 매칭이 어렵고, 특히 PCT 출원 수의 경우 장기간의 통계구득이 어려워 특허 출원 수만 공통지표로서 활용하도록 함.

– 기술개발 부문은 투자와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투자로는 R&D투자규모, 성과로는 지역내 특허 수 및 품질, 기술료 수입 등의 지표가 활용될 수 있음. R&D투자에서는 지자체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투자가 당시 민선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R&D사업의 성과로서 기술료 징수액, 특허 출원 수 등을 성과평가의 지표로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국가R&D

1) PCT는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으로, 해당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함.

매칭투자 및 기술료 징수액은 산업별로 세분화된 자료구득이 불가능하므로 공통지표로서 활용하도록 함. 다만, 특허 출원 수는 혁신환경 부문과 중복됨.

- 인력양성은 대학 및 전문대학뿐 아니라, 각종 직업학교와 기업 내부교육 등 다양한 형태와 전공분야가 존재하며, 특정 전략산업과의 전공별 연관성을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전공구분 없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 또는 졸업생 수를 반영하는 경우, 시기별 또는 전략산업별로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수도권의 인력이동의 수월성을 감안하면 산업성장과 인력양성의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영향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 과제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다만,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와 기업 내부 인력양성 기능을 감안하여,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기업지원 부문과 중복됨.
- 기업지원 부문은 각종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로서 나타나는 지표들을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 전산업 또는 제조업 기업 수 및 종업원 수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영세기업(5인 이하) 비중 등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본 과제에서는 영세기업 비중을 공통지표로 두기보다는 산업별 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며,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전산업과 제조업의 두 개 지표로 나누고, GRDP를 포함시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성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로 채택이 가능한 지표를 살펴보면, 기반구축 부문의 산업단지 계획입지 면적(비율), 외국계 기업 수, 혁신환경 부문의 신규기업 수, 특허 출원 수, 기술개발 부문의 국가R&D 매칭투자나 기술료 징수액, 기업지원 부문의 기업 수 및 종업원 수, 매출액 또는 생산액 증가율, 영세기업(5인 이하) 비중 등을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상기 사항들을 종합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위한 공통부문과 전략산업별 성과평가를 위한 산업규모, 성장성, 특화도의 3개 부문을 포함하여 총 5개 부문으로 지표를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활용 가능한 지표를 배분하면, 아래 〈표 2-4〉와 같음.

- 공통지표는 GRDP와 같이 특정 업종과는 무관하거나, 또는 업종보다는 지역 전체에 대한 기여도 측정과 관련이 큰 지표를 선정
- 다만, 공통지표의 5개 부문 간에 상호 중복되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여, 모든 지표가 부문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음.
- 업종별 지표는 산업규모, 성장성, 특화도 등 3개 구분에 따라,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지표를 배분함.

〈표 2-4〉 지역전략산업 성과 평가지표

부문		지표	비고
일반 현황 (공통)	기업	GRDP 비중(전국대비)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전산업 사업체 수/종사자 수 비중	상동
		제조업 사업체 수/종사자 수 비중	상동
	기반	계획입지 면적 비중	상동
		외국계 기업 수(누적)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혁신	특허 출원 수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신규기업 수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기술	국가R&D 매칭투자액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국가R&D 기술료 징수액	전국대비 비중 및 증가율
업종별	산업 규모	사업체 수	전산업 대비 비중 및 증가율
		종사자 수	상동
	성장성	매출액(또는 생산액) 증가율	전산업 대비 비중 및 증가율
		영세기업(5인 이하) 비중	전산업 대비 비중 및 증가율
	특화도	사업체 수 입지계수	전국 대비 특화도 및 증가율
		종사자 수 입지계수	전국 대비 특화도 및 증가율
		매출액(또는 생산액) 입지계수	전국 대비 특화도 및 증가율

○ 한편, 각종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바이오, 로봇 등 전략산업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9차 개정)의 중분류 수준에서 1:N 매칭을 통해 전환

– 물류, 자동차, IT, BT, 로봇 등 5개 지역전략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상 업종코드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음.

– 기업체 및 종사자 통계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세세분류 수준까지 제공되고 있으나, 매출액(또는 생산액) 자료는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에서 중분류 수준까지만 제공되고 있어, 업종 매칭도 중분류 수준으로 제한함.

Ⅲ

인천광역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분석

Ⅲ. 인천광역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분석

1. 성과지표 분석

○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인천시 민선정부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지역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적 측면에서 사업내용과 예산을 검토하여, 최종 전문가 평가에 활용하고자 함.

– 우선,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와 전략산업별 성과를 분석

– 다음으로, 민선정부별 주요사업과 예산규모를 검토하여, 성과분석을 보완

1) 지역경제 기여도

○ 지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는 특정산업과는 무관한 공통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표 3-1〉은 각 연도별 공통지표 현황을 나타냄.

– 대부분 지표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나, 계획입지면적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국가R&D 매칭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기술료징수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특허출원수는 특허청의 온라인 통계서비스를 통해 확보함.

〈표 3-1〉 인천시 전략산업육성 부문 공통지표 현황

지표			2006	2009	2013	2016
GRDP		규모(조원)	51.51	54.86	63.59	70.37
		비중(%)1)	4.72	4.62	4.62	4.68
		증가율(%)2)	-	2.12	3.76	3.43
전산업	사업체 수	규모(개사)	155,434	159,597	177,990	191,568
		비중(%)	4.82	4.85	4.84	4.85
		증가율(%)	-	0.88	2.76	2.48
	종사자 수	규모(명)	745,111	790,202	895,657	1,004,783
		비중(%)	4.83	4.70	4.67	4.73
		증가율(%)	-	1.98	3.18	3.91
제조업	사업체 수	규모(개사)	20,879	19,560	22,175	24,246
		비중(%)	6.30	6.11	5.98	5.82
		증가율(%)	-	-2.15	3.19	3.02
	종사자 수	규모(명)	225,572	208,176	229,736	247,613
		비중(%)	6.75	6.37	6.04	6.12
		증가율(%)	-	-2.64	2.49	2.53
계획입지 면적		규모(천㎡)	16,653	18,603	20,285	20,911
		비중(%)	1.42	1.38	1.48	1.49
		증가율(%)	-	3.76	2.19	1.02
외국계기업 수(누적)		규모(개사)	296	411	408	470
		비중(%)	3.07	3.91	3.62	3.89
		증가율(%)	-	11.56	-0.18	4.83
국가R&D사업의 지방정부 매칭비		규모(억원)	47	49	30	90
		비중(%)	2.68	2.24	0.90	2.60
		증가율(%)	-	1.40	-11.54	44.22
기술료 징수액		규모(억원)	68.6	57.9	82	84.2
		비중(%)	3.50	3.00	3.44	3.19
		증가율(%)	-	-8.13	9.09	0.89
특허 출원 수		규모(개)	3,632	5,719	6,185	5,989
		비중(%)	2.89	4.49	3.87	3.66
		증가율(%)	-	16.34	1.98	-1.07
신규기업 수3)		규모(개사)	44,8214)	43,498	41,563	49,099
		비중(%)	5.29	5.72	5.55	5.60
		증가율(%)	-	-0.99	-1.13	5.7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관련 자료원
주1) 전국대비 인천시 비중
주2) 해당년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CAGR)
주3) 전산업의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합계 수치
주4) 통계청 자료가 2007년부터 제공되어, 2006년은 2007년 자료로 대체함.

○ 민선4기(2006~2010년) 정부의 실질적 최종년도 시기인 2009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시점으로 대부분 지표에서 비교적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9년 이후에도 전산업 사업체 비중, 계획입지 면적 비중, 외국계기업 진출 비중, 신규기업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2016년까지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전산업 사업체 비중과 외국계기업 비중, 특허출원 비중, 신규기업 비중에서는 각년도를 통틀어 2009년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임.

– 이는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 초기의 기업 신규입지와 해외기업 및 연구개발센터 유치 확대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민선5기(2010~2014년) 정부 시기인 2013년에는 GRDP,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비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적인 성장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국대비 비중 측면에서 2009년에 비해 계획입지 면적 비중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GRDP 비중은 2009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산업 및 제조업의 사업체 비중과 종사자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외국계기업 수, 국가R&D사업의 지방정부 매칭비, 신규기업 수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특히 투입지표로 볼 수 있는 국가R&D사업의 지방정부 매칭비, 외국계기업 수, 신규기업 수에서 비중뿐 아니라 절대규모에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 당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

– 한편, 민선5기 당시 일자리와 투자유치 부문을 상당히 강조하였고, 반면 인천시의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감축이 국가R&D 매칭비, 외국계기업 수 및 신규기업 수 등 투자위축에 대한 합리적 설명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

○ 민선6기(2014~2018년) 정부 시기인 2016년에는 많은 지표에서 2009년의 수준 또는 소폭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2013년에 매우 저조하였던 국가R&D사업의 지방정부 매칭비, 외국계기업 수, 신규기업 수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 특히 외국계기업 수 증가는 당시 전반적인 해외 투자유치의 저조한 실적[2]에도 불구하고,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유치는 2014년 신고기준 17.1억US$, 도착기준 12.8억US$이며, 2016년 신고기준 15.7억US$, 도착기준 4.1억US$, 2017년에는 신고기준 9.9억US$, 도착기준 2.5억US$로 큰 폭 하락함.

양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본투자가 줄어든 반면 기업유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특허출원 수와 기술료 징수액에서 2013년 대비 다소 악화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로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3년까지의 저조한 투입이 이후 시기의 성과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한편, GRDP,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외국계기업 수, 신규기업 수 등의 증가율과 특히 비중 측면에서 2013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 전반적인 산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3년에 비해 2016년은 종사자 기준에서 소폭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 특히, 계획입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비중은 비교적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가율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산업입지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2006년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2006년보다 2009년에 다른 지표에서 대체로 개선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2013년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2016년에는 다소 회복추세를 나타냄.

- 2013년에는 전산업 및 제조업 종사자, 외국계기업 수, 신규기업 수 등의 전국대비 비중 측면에서 대부분 열악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입측면인 국가R&D 매칭비에서도 비중은 물론 절대규모도 크게 축소됨.
- 지표 가운데 투자유치 및 R&D 등은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성과가 당시 민선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산업별 성과

자동차산업

○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물류와 함께 지역의 전통적 주력산업으로 대표 자동차 업체인 GM의 상황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냄.

- 사업규모와 성장성 측면에서, 사업체와 생산액은 2013년, 종사자는 2016년에 증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세업체 비중은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국대비 비중 측면에서는 사업체와 생산액 및 종사자 모두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다만, 영세기업 비중에서는 2006년보다 2016년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특화도 측면에서 입지계수가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의 모든 면에서 '1'을 크게 넘어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위상은 갖추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6년 대비 사업체 수와 생산액 규모의 소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평균 성장세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 인천시 자동차산업 지표 현황

부문		지표		2006	2009	2013	2016
자동차	산업 규모	사업체 수	규모(개사)	545	462	628	668
			비중(%)	8.31	7.56	6.75	5.93
			증가율(%)	-	-5.36	7.98	2.08
		종사자 수1)	규모(명)	24,866	22,167	23,347	24,436
			비중(%)	8.86	8.44	6.93	6.64
			증가율(%)	-	-3.76	1.31	1.53
	성장성	생산액 증가율	규모(십억원)	7,848	7,741	10,938	11,360
			비중(%)	7.15	6.85	6.03	5.77
			증가율(%)	-	-0.46	9.03	1.27
		영세기업 비중	규모(개사)	176	170	262	285
			비중(%)	9.26	9.34	9.03	7.01
			증가율(%)	-	-1.15	11.42	2.84
	특화도	사업체 수	입지계수	1.73	1.56	1.39	1.22
			증가율(%)	-	-3.31	-2.77	-4.30
		종사자 수	입지계수	1.84	1.80	1.48	1.41
			증가율(%)	-	-0.72	-4.69	-1.78
		생산액	입지계수	1.29	1.49	1.41	1.24
			증가율(%)	-	4.83	-1.42	-4.0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1) 2016년 자료부터 해당분류 내 단일기업만 존재할 경우 종사자 수는 표기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세분류는 2015년 자료로 대체함.

로봇산업

○ 로봇산업은 로봇랜드 사업의 부진 등 전반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폭 성장하고는 있으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성장 폭을 추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규모 측면에서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에서 2009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3년 오히려 큰 폭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감소 폭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종사자에서는 2013년까지 큰 폭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를 나타냄. 2016년 현재 사업체수 36개사, 종사자수 419명으로 아직까지 산업 전체규모가 매우 작음.

– 성장성 측면에서는 생산액은 2009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전국대비 비중에서는 2013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다소 증가함. 영세기업 비중은 2016년 다소 감소 폭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냄.

– 특화도 측면에서 사업체는 2009년, 생산액 및 종사자는 2006년 가장 좋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특히, 2016년에는 종사자 입지계수가 급격히 하락함.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두 배 이상의 사업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지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지역 로봇산업이 전국적인 성장세를 추격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3〉 인천시 로봇산업 지표 현황

부문		지표		2006	2009	2013	2016
로봇	산업 규모	사업체 수	규모(개사)	15	19	26	36
			비중(%)	7.69	9.13	7.54	7.41
			증가율(%)	-	8.20	8.16	11.46
		종사자 수	규모(명)	266	282	447	419
			비중(%)	9.92	9.20	9.37	6.53
			증가율(%)	-	1.97	12.21	-2.13
	성장성	생산액 증가율	규모(십억원)	7,221	6,930	8,116	8,770
			비중(%)	11.75	9.53	8.15	8.68
			증가율(%)	-	-1.36	4.03	2.62
		영세기업 비중	규모(개사)	7	8	10	18
			비중(%)	11.86	12.12	8.77	8.61
			증가율(%)	-	4.55	5.74	21.64
	특화도	사업체 수	입지계수	1.60	1.89	1.56	1.53
			증가율(%)	-	5.69	-4.67	-0.63
		종사자 수	입지계수	2.05	1.96	2.01	1.38
			증가율(%)	-	-1.58	0.59	-11.67
		생산액	입지계수	2.13	2.07	1.90	1.87
			증가율(%)	-	-0.84	-2.15	-0.5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바이오산업

○ 지역내 전략산업 가운데 바이오산업은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국적인 성장세와 비교할 때 사업체와 생산액은 201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야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사업규모 측면에서는 2009년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사업체 수는 2016년에 증가 폭이 크게 증가하였음.

– 성장성 측면에서 생산액은 2013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양세이며, 영세기업 비중은 2009년 크게 개선되었다가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함.

– 특화도 측면에서 사업체 입지계수는 2013년까지 감소하다 2016년에 다소 개선되었으며, 종사자 입지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반면 생산액은 2009년에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하다 2016년 소폭 개선됨.

– 종합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6년에야 다소 개선되는 형태를 보임.

〈표 3-4〉 인천시 바이오산업 지표 현황

부문		지표		2006	2009	2013	2016
바이오	산업 규모	사업체 수	규모(개사)	1,492	1,390	1,644	2,149
			비중(%)	7.78	7.58	7.12	7.40
			증가율(%)	-	-2.33	4.28	9.34
		종사자 수	규모(명)	12,491	12,151	15,758	19,245
			비중(%)	6.70	6.62	7.08	7.43
			증가율(%)	-	-0.92	6.71	6.89
	성장성	생산액 증가율	규모(십억원)	15,846	17,125	20,737	22,657
			비중(%)	6.46	5.49	4.61	5.06
			증가율(%)	-	2.62	4.90	3.00
		영세기업 비중	규모(개사)	840	792	979	1,307
			비중(%)	7.85	7.69	7.13	7.36
			증가율(%)	-	-1.94	5.44	10.11
	특화도	사업체 수	입지계수	1.61	1.56	1.47	1.53
			증가율(%)	-	-1.04	-1.54	1.26
		종사자 수	입지계수	1.39	1.41	1.51	1.57
			증가율(%)	-	0.52	1.82	1.25
		생산액	입지계수	1.17	1.19	1.08	1.09
			증가율(%)	-	0.71	-2.57	0.4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물류산업

○ 지역내 전통적인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물류산업은 지속적으로 산업규모나 입지계수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나, 생산액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전국적인 성장세와 비교할 때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규모 측면에서는 2006년 이후 사업체와 종사자 수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2013년과 2016년에 증가 폭이 매우 컸음.

– 성장성 측면에서 생산액 증가율은 2009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3년 큰 폭 증가하였고, 영세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 증가율 측면에서 다소 개선됨.

– 특화도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입지계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액 입지계수는 2009년 큰 폭 하락하였다가 회복됨. 사업체와 종사자 입지계수는 1을 넘는 반면, 생산액 입지계수는 1에 못 미침.

〈표 3-5〉 인천시 물류산업 지표 현황

부문		지표		2006	2009	2013	2016
물류	산업 규모	사업체 수	규모(개사)	10,770	10,834	12,903	14,579
			비중(%)	6.32	6.45	6.76	7.08
			증가율(%)	-	0.20	4.47	4.15
		종사자 수	규모(명)	25,248	26,499	31,352	37,256
			비중(%)	5.34	4.87	5.23	5.91
			증가율(%)	-	1.63	4.29	5.92
	성장성	생산액1) 증가율	규모(십억원)	9,765	9,328	13,159	13,637
			비중(%)	4.90	3.62	3.99	4.10
			증가율(%)	-	-1.51	8.98	1.20
		영세기업 비중	규모(개사)	9,873	9,964	11,892	13,320
			비중(%)	6.20	6.40	6.71	7.01
			증가율(%)	-	0.31	4.52	3.85
	특화도	사업체 수	입지계수	1.31	1.33	1.40	1.46
			증가율(%)	-	0.50	1.18	1.50
		종사자 수	입지계수	1.11	1.04	1.12	1.25
			증가율(%)	-	-2.15	1.97	3.73
		생산액	입지계수	0.96	0.83	0.95	0.94
			증가율(%)	-	-4.96	3.61	-0.3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1) 제조업은 생산액, 서비스업은 매출액 자료가 제공되므로, 물류산업의 제조분야는 생산액 및 서비스분야(운수업, 서비스업)는 매출액의 합계로 산출

IT·SW산업

○ IT·SW산업은 비교적 장기간 일정 수준의 규모와 집적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역 전략산업 가운데 가장 특화도가 낮고,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전국대비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집적도에도 국가적인 평균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업규모 측면에서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에서 2013년과 2016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성장성 측면에서 생산액은 2013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며, 영세기업 비중은 2013년 크게 개선되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함.

– 특화도에서 사업체 입지계수만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특화정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 입지계수는 2016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2013년 큰 폭 증가한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6〉 인천시 IT·SW산업 지표 현황

부문		지표		2006	2009	2013	2016
IT·SW	산업규모	사업체 수	규모(개사)	3,600	3,820	5,184	5,889
			비중(%)	5.62	5.30	5.24	5.36
			증가율(%)	-	2.00	7.93	4.34
		종사자 수	규모(명)	33,340	30,471	39,532	47,009
			비중(%)	3.89	3.57	3.75	4.32
			증가율(%)	-	-2.95	6.72	5.94
	성장성	생산액1) 증가율	규모(십억원)	6,567	7,927	11,599	13,212
			비중(%)	2.50	2.27	2.56	2.86
			증가율(%)	-	6.48	9.98	4.43
		영세기업 비중	규모(개사)	2,319	2,586	3,536	4,096
			비중(%)	5.57	5.24	5.06	5.29
			증가율(%)	-	3.70	8.14	5.02
	특화도	사업체 수	입지계수	1.17	1.09	1.08	1.11
			증가율(%)	-	-2.13	-0.25	0.70
		종사자 수	입지계수	0.81	0.76	0.80	0.91
			증가율(%)	-	-1.96	1.43	4.40
		생산액	입지계수	0.54	0.54	0.61	0.60
			증가율(%)	-	-0.08	3.32	-0.3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1) 제조업은 생산액, 서비스업은 매출액 자료가 제공되므로, IT·SW산업의 제조분야는 생산액, 서비스분야(도소매업, 서비스업)는 매출액의 합계로 산출함.

3) 소결

○ 매 민선정부마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하기 어려우며,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체와 종사자 등 산업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인 성장세에 못 미치거나, 산업별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차와 로봇산업은 완만한 감소추세에 있고, 바이오산업은 대기업의 유치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2009년까지 크게 성장한 이후 종사자를 제외한 사업체와 매출액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물류는 전통 전략산업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비해 생산액 증가율이 낮아, 영세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IT·SW산업은 성장의 정체와 함께 지역 특화도도 낮은 수준임.

– 결국 지금까지 인천시의 산업육성정책은 최소한 5개 전략산업에 한해서만큼은 그다지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전통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축소와 신성장산업인 로봇과 바이오산업의 성장세 정체는 향후 인천시의 미래먹거리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

– 물류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산업에서 평균적으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물류 외에 자동차와 바이오 및 로봇산업의 지역 특화도가 비교적 높지만, 점차 하락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임. 혁신클러스터의 집적정도가 어느 정도 임계규모에 도달하면 자생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바이오 및 로봇 등 단지조성 초기의 집중된 집적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계규모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고 유지·확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공통지표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읽을 수 있는데, 인프라와 투입 측면의 지표들인 계획입지 면적 비중, 외국계기업 비중, 국가R&D사업 지방정부 매칭비 비중, 기술료 징수액 비중, 특허출원 비중 등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인천시 제조업은 물론 전산업 평균 비중에도 크게 부족함.

– 외국계기업 및 신규기업 비중의 정체는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노력에 비해 특히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상기 전국 평균 이하의 지표에서 인프라를 나타내는 계획입지 면적 비중을 제외한 연구개발, 기술료, 특허 등 대부분 소프트웨어적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내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투자가 매우 미흡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

– 다른 측면에서, 수평적, 수직적 협업환경이 갖추어지기에는 아직까지 집적정도가 미흡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수직적 연계도 미흡하여 산업별 지역 특화도의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계획입지 면적 비중이 낮은 것도 기존 산업단지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계획입지를 중심으로 한 집적지 조성에 다소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공업지역이나 물류단지 등이 제외된 것이라는 점과 최근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집적지 조성은 어느 정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물리적 집적지 조성전략에서 더 나아가, 집적지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며, 더불어 기업유치 및 창업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내실화함으로써 집적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과거 민선정부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살펴보고,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혁신기반조성과 기업유치 등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함.

2. 사업분석

○ 인천시의 각 민선정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고, 당시의 정책기조를 검토하여, 제1절의 성과분석에 대한 보완자료로 활용함.

– 매 연도별 경제 및 산업 전담부서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되,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차사업이나 10억 이하의 소액사업은 가능한 제외

– 다년간의 대형사업은 추진계획 수립 등 착수준비 시작 시점이나 착공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주요사업을 기반구축, 혁신환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의 5개 부문별로 나누되, 두 군데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배분함.

1) 주요사업 분석

○ 민선3기 때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시작으로 바이오 생산 및 R&D 시설이 본격적으로 착공되었고, 바이오센터, 송도테크노파크 등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음.

– 국내 최초 UN기구인 UN ESCAP APCICT 센터 유치, GM R&D시설 외자유치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 투자유치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됨.

– IHP 조성용역 실시,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영종물류복합단지 개발구상(안) 수립,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초그림이 완성된 시기임.

– 이 외에도 제1차 지역혁신5개년계획 수립, Sea&Air 복합물류체계 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국방벤처센터 조성, 인천벤처펀드 조성 등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표 3-7〉 인천광역시 민선3기(2002~2006)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기반구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송도 첨단바이오단지 Bio 신약 생산시설 및 R&D Center 착공 • Sea&Air 복합물류체계 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4개 지역 물류거점기지 조성 • 송도테크노파크 조성 및 지원(95억원) • 국내 최초 UN기구 UN ESCAP APCICT 센터 송도 유치('05.5.) • GM R&D시설 외자유치 계약체결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05) • IHP 조성용역 실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 •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기반시설공사 착공 • 영종물류복합단지 건설 : 개발구상(안) 수립 및 SPC 구성 협의 • IFEZ u-City 사업 추진 :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등
혁신환경	• 인천 BIO산업 지원센터 구축 •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구축(35억) •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2004~2008) 수립 • 국방벤처센터 조성 등 벤처기업 육성(25억)
기술개발	• 부평디자인센터 건립
인력양성	•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계획 제출
기업지원	• 개성공단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강화(2억원) • 인천벤처펀드 105억원 조성('05.11.)

○ 민선4기는 민선3기의 연장선 상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세부사업들이 추진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데 기초가 되었고, 각종 혁신환경 조성사업이 병행되었음.

– 송도컨벤션센터 건설, u-IT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국제금융허브 조성, 청라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골프장 등) 조성, 청라 로봇랜드(산자부 공모사업) 조성계획 수립, 청라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BIT Port 유치 협약, IHP 조성사업 착공,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BRC 조성사업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승인,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 완공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한편,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제2차 지역발전5개년 계획 수립, 400억 규모의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 추진, 2009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개최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혁신환경 조성사업도 병행 추진되었음.

〈표 3-8〉 인천광역시 민선4기(2006~2010)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기반구축	• u-IT 클러스터 조성(1,195억원) • 동북아 국제금융허브 조성(544억원) - 국제업무타운 조성(Pangaea-포스코 컨소시엄) 및 금융허브 조성(WTC청라 컨소시엄) • 청라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골프장 등) 조성(638억) • 청라 로봇랜드(산자부 공모사업) 조성계획 수립 • 청라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BIT Port 유치 협약 • IHP 조성사업 착공(2012년 준공 예정) •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 BRC 조성사업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승인 •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공포 • 밀라노디자인시티·트리엔날레관 개관 •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2차, 655,919㎡)(2013년 준공 예정)
혁신환경	• 송도컨벤션센터 건설(55억원) •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반영 • 제2차 지역발전5개년 계획 수립 • 2009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개최
기술개발	•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 추진(417억원) - 마이크로조이닝 공동기반구축 외 4개 사업
인력양성	•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및 뉴욕주립대 개교(2010. 9.)
기업지원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준공(2010. 4)

○ 민선5기에는 이전 정부의 계속사업과 함께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음.

–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LG V-ENS 등 국제기구 및 기업, R&D센터 유치

– 인천테크노파크 송도사이언스빌리지 R&D용지 및 자동차부품센터 조성 및 기업유치,

송도글로벌캠퍼스 1단계 1~2공구 완공 및 대학 입주, 청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 수립,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A·2B단계 캠퍼스 완공 및 대학 입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 지식경제부 승인 등 전 정부의 계속사업들이 본격 착수하거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함.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 강화산업단지 국비 확보,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민선5기의 독자적 사업으로 원도심의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함.

– 인천투자펀드 조성,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인천TP 중심의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지역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론칭 등 창업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

〈표 3-9〉 인천광역시 민선5기(2010~2014)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기반구축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2011.5) • LG V-ENS 투자 유치(2011.11 착공) • 인천테크노파크 송도사이언스빌리지(1차) 기업연구소 입주(2011년 현재 총150개소) - 송도사이언스빌리지(2차) 복합시설용지(Street Mall) 사업중단 - R&D용지(착수률 50.7%), 자동차부품센터(8월 착공) • 강화산업단지(2011~1015) 국비 확보 • 서운산업단지(2012~2016)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14.7.) •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12.10.) • 청라 복합쇼핑몰 사업협약 체결 및 '16년 준공계획 수립 • IHP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착공('12.2.) • 2013년 송도지구 4차 U-시범도시(U-케어카드서비스 등) 확정 • U-시범도시 5단계 조성사업 준공('14년) 및 통합운영센터 본격 운영 • 기업 및 투자유치 - Amkor Technology, 아지노모도제넥신(주), 보잉항공, 두산인프라코어 R&D센터 준공(7월), STATSChipPAC KOREA 반도체 공장 및 R&D센터 준공(12월)
혁신환경	• 인천TP 중심의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2012~2016)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 지식경제부 승인('12.12.)
기술개발	•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2012~2016)
인력양성	• 송도글로벌캠퍼스 1단계 1~2공구 완공('12.7.) •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A·2B단계 캠퍼스 완공 •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지메이슨·겐트·유타 대학교 2014년 개교
기업지원	• 인천투자펀드 880억원 조성(2011~2014년)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2012~2014, 총 사업비 23억원)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14.11.) • 공동브랜드 '어울(Oull)' 론칭('14.10)

○ 민선6기에는 이전 정부의 원도심 인프라 조성사업이 일부 준공되어 기업유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분야 기업지원기관 통합 등 기존체제의 효율화 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전개되었고, 후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 인프라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원활히 추진되지는 못함.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SW융합클러스터 구축, 경제분야 기업지원기관 통합 등 국책사업 및 기존시스템 효율화 사업과 더불어, 「공정무역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인천 창업허브(HUB) 구축 사업, 인천 창업재기펀드 조성 등 창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사업이 본격화되었음.

– 한편, 후반기에는 해양에너지 메카시티 조성 사업, 강화남단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추진계획 수립,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 계획수립 등 인프라 확장사업이 계획되었음.

〈표 3-10〉 인천광역시 민선6기(2014~2017)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기반구축	• 강화일반산단(2011~2017) 부지조성사업 준공 인가('15.12.) • 서운일반산단(2012~2018) 부지조성공사 착공('15.12.)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공장 준공('15.2.) • 해양에너지 메카시티 조성 : ECO-ISLAND 조성사업 추진 • 강화남단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강화휴먼메디시티사업 MOU체결('17.11.) •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추진계획 수립('17.11.) •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12~'22년) 계획수립('17.11.)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공사(2012~2019년) 착공('17.12.) • 기업 및 투자 유치 - 하나금융타운 "통합데이터센터" 착공('15.6.),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로지스틱스(1월), 포스코 A&C(4월) 등 유치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개관('16.4.), 왕산마리나 사업 준공('16.8.)
혁신환경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 경제분야 기업지원기관 통합 • 인천 창업허브(HUB) 구축 사업제안서 최종 선정('17.12.) • 375억원 규모의 인천 창업재기펀드 조성('17.11.) • 4차산업혁명 선도대응 사업화 추진('17.4.~'17.5.)
기술개발	• SW융합 클러스터 구축('15년도 9개 세부사업 추진)
인력양성	• 인천글로벌 캠퍼스 1단계 3공구 준공('15.12.)
기업지원	• 「공정무역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 지원 • IFEZ바이오분석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 분석서비스 개시('15.2.)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愛仁카드 사업자 선정('17.12.)

○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각 민선정부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민선3~4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더불어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들도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임.
- 민선5기는 창업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강조하면서, 원도심 인프라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시기
- 민선6기는 이전 정부의 인프라를 토대로 기업유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창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강조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2) 예산

○ 시기별 경제·산업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들이 완료되면서 인프라 사업이 줄어들어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규모 비중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민선3~4기에는 2009~2010년의 2개년도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2005~2008년 사이의 금액규모를 보면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민선5기에도 비슷한 규모이지만 인천시 전체 예산규모의 확장으로 비중은 다소 낮아지거나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당시 로봇랜드 공공시설 인프라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 민선6기의 경제·산업 분야 예산규모는 더 줄어들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시기 대형 인프라 사업이 없었다는 점과 시의 재정적자를 크게 해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적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에서 실질적 감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시기별 예산규모는 거대 인프라 및 국책 사업의 유무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규모와 비중만으로 정책사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다만, 경제자유구역 사업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 분야 예산규모는 점차 다소 축소되는 추세에 있어, 비중이나 실질적인 투자는 상당한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인프라 사업과 국책사업의 감소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연차별 예산규모에 변화가 크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경제·산업 정책이 주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프라 사업과 국책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표 3-11〉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 예산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연도	인천시 전체 예산	경제산업 분야 예산	비중
민선3기 (2002~2006)	2003	-	-	-
	2004	-	-	-
	2005	-	1,083	-
	2006	-	1,166	-
민선4기 (2006~2010)	2007	-	1,266	-
	2008	-	1,047	-
	2009	65,583	941	1.43
	2010	71,076	1,299	1.83
민선5기 (2010~2014)	2011	65,637	993	1.51
	2012	75,448	987	1.31
	2013	69,768	1,044	1.50
	2014	78,373	1,405	1.79
민선6기 (2014~2018)	2015	77,646	1,088	1.40
	2016	81,903	1,034	1.26
	2017	83,166	942	1.13

Ⅳ
주요 성과와 개선방안

Ⅳ. 주요 성과와 개선방안

1. 종합분석

1)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 제3장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특정산업의 성장성과의 두 개 측면에서 성과지표 분석을 실시하고, 시기별 주요사업과 예산에 대해 살펴보았음.

– 성과지표 분석결과는 지표별로 계량적 수치로 나타나므로, 단일화된 종합점수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수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음.

– 주요사업과 예산에 대한 분석은 성과지표 분석의 보완적 자료로서 검토되었으며, 당시 투자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인 최종 성과분석 결과에 일정부분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계량화된 수치로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성과평가 지표분석과 정성적 검토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시기별 강약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제3장의 성과지표 분석과 사업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전략산업 정책분야별로 시기별 취약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는 경제·산업 분야의 정책실무자(3명), 교수(2명), 연구자(3명), 시민단체(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 설문은 기반구축, 혁신환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의 5개 부문에 대해 예산, 적정성, 성과의 3개 차원을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함(〈표 4-1〉 참조).

– 이때 3개 차원 가운데 예산은 재정과 인력투입의 규모를, 적정성은 정책의 적시성 및 과정의 합리성, 성과는 정책시행 결과에 따른 지역소득 향상, 고용창출 등 지역성장 기여도와 기업집적도 향상, 수출확대 등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성과를 묻는 것임.

– 또한, 5개 부문은 제2장의 검토 결과와 같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지원사업의 5개 분류 항목을 활용한 것으로, 육성정책의 부문별 취약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것임.

○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5개 부문에 대해 제2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반구축은 클러스터 조성과 각종 지원시설 도입에 대한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공통기반시설 구축, 기업유치 등을 포함함.

– 혁신환경 부문은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킹 등 혁신환경 조성을 의미하는데, 창업기업 비율, 특허 출원 수 등 해당 지역의 혁신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와 관련이 있는 정책을 포함

– 기술개발은 R&D투자 및 성과를 의미하며, 지역 R&D 투자규모, 국가R&D사업 지자체 매칭 투자규모, 국가R&D사업 기술료 징수액, 특허 출원 수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을 포함

– 인력양성은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학교육뿐 아니라, 각종 직업학교의 퇴직자 및 재직자 교육 등을 포함하며, 고용을 통한 기업 내부 인력양성 기능도 포함

– 기업지원은 각종 세제혜택, 마케팅 및 수출지원 등 직접적인 기업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업의 증가, 생산액의 증가, 영세기업 비중의 감소 등의 지표와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을 포함

○ 이와 같이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4-1〉과 같음.

– 설문은 기반구축, 혁신환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의 5개 부문에 대해 예산, 적정성, 성과의 3개 차원의 15개 항목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함.

– 본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제3장의 성과지표 분석 및 사업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각 시기별로 5개 부문의 3개 차원에서 분석결과를 종합함으로써, 각 부문별 시기별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자 함.

〈표 4-1〉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민선3기 (2002~2006)				민선4기 (2006~2010)				민선5기 (2010~2014)				민선6기 (2014~2017)				전체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기반구축	3.5	3.7	3.5	3.6	3.6	3.5	3.6	3.6	2.6	3.0	2.9	2.8	2.9	3.2	3.4	3.2	3.3
혁신환경	3.2	3.2	3.2	3.2	3.4	3.3	3.6	3.4	2.7	2.5	2.8	2.7	3.5	3.6	3.4	3.5	3.2
기술개발	2.9	3.1	2.9	3.0	3.3	3.3	3.3	3.3	2.7	2.6	2.4	2.6	2.9	3.0	3.1	3.0	3.0
인력양성	2.6	2.9	2.6	2.7	3.0	3.1	3.0	3.0	2.9	3.1	2.8	2.9	3.0	3.0	2.9	3.0	2.9
기업지원	3.3	3.2	3.3	3.3	3.1	3.0	3.1	3.1	3.2	3.3	3.1	3.2	3.0	3.3	3.5	3.3	3.2

2) 종합

○ 상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5대 부문별 각 민선정부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비록 매우 제한된 표본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성과지표 분석 및 사업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와 성과지표 분석 및 사업분석을 연계함으로써, 인천시 민선정부별 성과를 해석하고자 함.

○ 기반구축의 측면은 민선3기와 4기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민선5기에 하락하였다가, 민선6기 때 다소 회복

– 제3장의 성과지표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기반구축과 관련이 있는 공통지표에서 계획입지 면적은 민선3기에 비해 민선4기때 다소 줄었다가, 민선5기 때 크게 회복되었고, 이후 소폭 증가추세이며, 외국계기업 수는 민선5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임.

– 민선3기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초기에 기본적인 계획들이 완성되고, 사업도 활발히 전개됨. 당시 바이오 관련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졌고, 인천테크노파크, 국제학술연구단지 등이 착공되었음.

– 민선4기에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송도컨벤션센터, u-IT클러스터, 로봇랜드, BIT-Port, BRC,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동북아 국제금융허브 조성,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청라IHP 등 다수의 기반사업들이 착공되었거나 계획이 수립되었음.

– 민선5기에는 이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지속되었으나,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인상적인 사업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로봇랜드, 글로벌캠퍼스, u-IT클러스터 사업 등 주요사업이 착수시점부터 또는 운영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치기 시작한 시점이지만, 대부분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음.

• 반면, 강화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등의 원도심 산업 인프라 조성사업들은 활발히 진행되었음.

– 민선6기는 기존의 문제사업들이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남단지역 및 서부산단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복잡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전 정부에서 착공한 강화 및 서운산단에 대한 기업입주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여, 기반구축의 중요한 한 축인 기업유치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음.
- 이 외에도 원도심 산업 인프라로서 남촌산업단지가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남동국가산단이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혁신환경 부문은 기업지원과 함께 기반구축 다음 순위로 중간수준의 점수이며, 민선5기때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이는 지역산업정책이 주로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지원사업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비 매칭규모가 가장 작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공통지표는 특허출원 수 측면에서는 민선3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민선6기에서 주춤한 상태이며, 신규기업 수는 민선4기, 민선5기에서 소폭 감소하였다가 민선6기에 들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냄.

– 민선3기 때는 인천 BIO산업 지원센터, 부평디자인센터, 송도테크노파크 조성, 지역혁신 발전5개년계획(2004~2008) 수립, 국방벤처센터 조성, 국제학술연구단지 및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됨.

– 민선4기에도 송도컨벤션센터 건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역발전5개년 계획 수립, 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개최 등 혁신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거나 직접적인 네트워킹 사업들이 전개되었음.

– 민선5기에는 제물포스마트타운(JST)과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인천TP 중심의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등 창업과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공통지표의 신규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때 성과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국제행사 등은 이 시기 오히려 감소하였음.

– 민선6기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인천 창업허브 구축사업 선정 등 국가R&D사업 참여와 창업이 한층 강조되었고,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됨. 다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 외에 산학연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국제활동 등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한 시기임.

○ 기술개발 부문은 성과평가의 5개 부문에서 4위의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임.

– 공통지표에서 국가R&D사업 지방비 매칭규모는 민선5기 때 대폭 축소되었다가, 민선6기 들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내며, 기술료 징수액은 민선4기 때 감소하였다가, 민선5기에

들어 큰 폭으로 회복함. 특허출원 수는 전국대비 비중에서 민선4기 때가 가장 좋았고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 기술개발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지만, 특별히 어떤 시기에 강화되었거나 약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투자와 성과가 미흡하고, 정책도 대부분 국책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력양성은 5개 부문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민선4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음.

- 이는 민선4기 때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지표의 전산업 종사자 수의 전국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민선3기 이후 민선5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민선6기에서야 다소 회복됨.
- 민선6기에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글로벌대학캠퍼스의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계속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해외대학 유치 등 자체적인 성과와 인력양성 사업은 거의 없었음.

○ 기업지원 부문은 혁신환경과 함께 기반구축 다음으로 중간수준의 점수를 나타냄.

- 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사업 및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각종 기업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모든 시기에 걸쳐 특별히 기업지원 부문이 강조되거나 새롭게 발굴된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민선5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규모가 크게 감소되었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공통지표를 살펴보면, GRDP의 전국대비 비중은 민선4기와 5기 때 낮게 나타나고, 전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민선5기 때 다소 낮게 나타남. 제조업 사업체 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민선5기에 가장 낮았다가, 민선6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임.
- 대표적인 사업으로 민선3기의 송도TP 및 국방벤처센터 조성, 민선4기의 BRC 및 u-IT 클러스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 민선5기의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민선6기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허브 조성 등이 있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은 기반구축과 기업지원 및 혁신환경 부문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

– 기반구축 부문도 갈수록 소폭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민선5기 외국계기업 수의 마이너스 성장은 기업유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누적으로는 외국계 기업 수와 신규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업 사업체 수 비중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유치와 함께 이탈하는 기업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최근 조성된 클러스터가 아직까지 자생적인 집적 활성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거나, 전국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최고수준의 투자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수 정체 상황을 고려하면, 클러스터의 임계규모에 도달할 시점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혁신환경은 중간수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R&D 등 소프트웨어적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주로 인프라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나마 인력양성 부문은 최근 민선6기의 전산업 종사자 수가 다소 증가하여, 고용이 개선됨으로써 성과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개발 부문도 민선5기에 비해 민선6기에 다소 개선된 결과를 나타냄. 그럼에도 민선6기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부문의 점수가 5개 부문 가운데 가장 낮음.

– 특히, 독자적인 R&D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유치된 글로벌대학캠퍼스 및 연세대 국제캠퍼스, 해외 R&D 센터 등 혁신자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수준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2. 개선방안

혁신지원 시설의 확충과 효과적 운영

○ 지역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항만 배후단지 등 물리적 인프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음.

– 민선4기에 RFID/USN센터가 들어섰으나, 활용도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중소기업 수요에도 적합하지 않아, 일부 시설을 매각하여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BIO산업 지원센터도 설립되었으나, 지자체 예산의 한계로 일부 분석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부 산학연 연계 기업지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던 BIT-PORT 사업은 무산되었고, 로봇 수요창출을 목표로 했던 로봇랜드 사업은 토지 소유권 문제 등으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으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도 사업성으로 인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사업도 기부금, 기업유치 등의 문제로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와 같이 클러스터내 혁신환경을 촉진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네트워킹 촉진시설의 조성사업이 중단되거나, 여러 원인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거의 없어, 당초 계획에 비해 혁신지원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 항공, 첨단자동차, IT 등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및 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공통기반시설이 확충되거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충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앵커기업과 연관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

○ 제3장의 성과지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초창기에 해외 기업유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에 비해, 최근 다소 주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전략산업의 특화도도 오히려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역내 클러스터의 집적도는 임계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바이오 산업은 일부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개발 및 부품소재 중소기업과의 연계나 입지가 아직은 미흡

–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대기업의 수직관계에 의한 집적도가 매우 높지만, 해당 대기업의 수출 하락세 등으로 점차 집적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대체안으로 전기자동차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로 연구개발 시설에 머물러 있어, 관련 중소기업과의 연계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 상기 사항을 고려하면, 앵커기업 유치 또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수직적 연계 중견중소기업의 유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나, 민선5기 때 기업유치가 크게 감소하였고, 최근 민선6기에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IT산업 등은 동종업종을 중심으로 한 앵커기업 유치를 강화해야 하고, 이미 앵커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가치사슬에 따른 수직적 집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치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지원해야 함.

–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 산업은 기존 연구개발 시설과 연계한 첨단제조시설의 입지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사회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충 및 R&D 투자확대

○ 산학연 촉진을 위해서는 공통기반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조달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협력에 대한 동기 확충이 매우 중요함.

– 인천지역은 혁신을 주도할 지역대학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대학캠퍼스를 조성하였으나, 이들 대학의 활용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

– 특히 글로벌대학캠퍼스의 경우 인천시에서 인프라를 제공하고, 해외 유수대학이 입지하여 글로벌 인재의 양성과 국제적 과학기술 협력에 기여하도록 계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인천시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지원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임.

– 오히려 입주대학이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대학에 대한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폐쇄시킴.

○ 이들 캠퍼스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은 물론 대학과 지역 기업간 협력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지원기관의 중개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글로벌대학캠퍼스에 입주한 해외대학들은 아직 국내환경에 익숙하지 못해, 자발적인 산학연 연계 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캠퍼스 운영재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학운영뿐 아니라, 산학협력단 및 창업지원단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학과 지역내 유치기업 및 기존 기업과의 산학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의 발굴과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하나, 인천시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예산은 전무한 실정

– 한편, 글로벌대학캠퍼스의 대학유치 및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여, 캠퍼스 자체의 활성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산학연 참여주체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활동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가능하나, 가장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산학연 공동 R&D사업의 확산을 통한 연구개발비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각종 국책 R&D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에 비해 R&D 지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천시 자체 예산지원 또는 각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글로벌 혁신환경 및 문화 확산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천시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자처해 왔으나, 그나마 가장 진전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에서 조차도 임상 및 부품소재 등 연구개발 및 제조 관련 시설과 전문인력 양성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대학 및 글로벌 R&D센터와 제조시설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술개발 과정과 가치사슬을 따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연구개발과 제조의 동종 및 이종간 연계 협력수준도 미흡한 상황

– 이러한 상황은 동종업종의 집적도가 향상되어 수요가 증가하면, 점차 해소되어 나갈 부분도 있기는 하나, 단기간 제한된 토지에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교하게 의도된 산업별 유치전략이 필요함.

○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환경 및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고급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어우러져야 가능

– 최근 기업 및 해외대학 유치현황 등을 살펴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초창기에 비해 관심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과 주거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여건개선이 동반 진전되어야 함.

– 또한, 과학기술 문화확산과 지식재산 중심의 도시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종합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음.

V

결론 및 정책제언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인천광역시는 1999년 「인천산업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2003년에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2004~2008)」을 수립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지역산업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함.

– 이후 인천시의 각 민선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제시

–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

○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는 시기별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들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토는 다소 미흡

–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정책의 개선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정책발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역산업정책이 자율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광역시의 민선정부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지역경제 기여도와 해당 전략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검토하고,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를 선별하고, 각종 지역통계는 물론 연도별 시정백서와 경제 관련 부서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그간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지역 경제적 기여도와 전략산업의 성장성과를 검토함.

– 또한, 민선정부별 비전과 목표, 조직은 물론 주요사업 및 예산 등을 검토하고, 성과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시기별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최종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와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분석과정에서 주요사업과 정책의 시기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민선정부별로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본 과제의 목적이 민선정부별 성과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으므로, 특정 시기와 무관하게 과거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취약점들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음.

– 다만, 조사과정에서 연차별 시정백서, 부서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특정년도의 자료 미비, 산업별 통계자료의 미비 등으로, 일부 자료는 유사자료로 대체하거나, 제외하는 등 연구진행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다년간 인천의 산업정책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으로 소수의 평가자만으로 결론을 유추하는 한계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기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고, 성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의 발굴과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혁신지원 시설의 확충과 효과적 운영 : 지역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항만 배후단지 등 물리적 인프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반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음. 미래 전략산업인 바이오, 항공, 첨단자동차, IT 등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및 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공통기반시설이 확충되거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충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앵커기업과 연관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IT산업 등은 동종업종을 중심으로 한 앵커기업 유치를 강화해야 하고, 이미 앵커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가치사슬에 따른 수직적 집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지원해야 함. 또한,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 산업은 기존 연구개발 시설과 연계한 첨단제조시설의 입지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 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확충 및 R&D 투자확대 : 인천지역은 혁신을 주도할 지역대학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대학캠퍼스를 조성하였으나, 이들 대학의 활용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지역내 대학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은 물론 대학과 지역 기업간 협력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지원기관의 중개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글로벌 혁신환경 및 문화 확산 :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환경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고급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어우러져야 가능

2. 정책제언

○ 본 과제의 목적이 지금까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현재 민선7기 정부의 출발시점에 즈음하여 향후 시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장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선7기 정부의 선거공약집을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도시',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지는 재창조도시',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을 4대 비전으로 하여, 경제 및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상기 4대 비전은 중심도시, 심장 등 인천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음.

– 민선7기 정부는 상기 비전별로 목표와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표 5-1〉의 공약 가운데 경제·산업 분야의 사업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5개 부문별로 분류하면 〈표 5-2〉와 같음.

– 모든 사업이 특정 부문에 배타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5개 부문별로 엄격한 분류는 어려우나, 〈표 5-2〉와 같이 대부분 공약사업이 기반구축 및 혁신환경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음.

–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부문은 여전히 구체적 사업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나, 기반구축 및 혁신환경 부문의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사업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반구축 부문의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들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 대부분 선거공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럼에도 일정 부분 혁신환경 조성 측면에도 사업들이 안배되고 있어, 인프라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부문에 대한 사업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음.

– 또한, 혁신환경 부문의 사업들도 향후 세부 추진방향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인프라 조성에 가까운 성격을 띨 수 있는 사업들이거나, 창업 관련 사업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추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표 5-1〉 인천광역시 민선7기 선거공약의 주요 내용

비전	목표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도시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구 조성	◦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 UN 평화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 인천-해주-개성을 연결하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 한강하구-해주-대동만-백령도-강화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 ◦ 남북공동어로구역·해상파시·한반도해양평화공원을 조성하여 NLL을 평화의 바다로 ◦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 ◦ 동북아 시대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 인천을 위한 '땅길, 바닷길, 하늘길' 제2의 인천개항 추진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지는 재창조도시	인천 균형발전시대 개막	◦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맞춤형 원도심 혁신지구 지정 ◦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원도심전담 부시장제 도입,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 설립 ◦ 시장직속 시민중심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지역별 현장소통센터 설치 ◦ 인천내항 재개발, 부평 군부대 이전 등 거점별 패키지 도시재생 추진 ◦ 청년창업, 복합문화, 지역상권, 지역대학 등 맞춤형 원도심 혁신지구 지정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서울지하철 2호선의 청라국제도시까지 환승 없는 연장으로 10분대 서울 진입 실현	◦ 서울지하철 2호선을 환승 없이 청라까지 연장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조기 착공 ◦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접 연결 운행하고 영종도 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성 ◦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 서울지하철 4호선을 인천역까지, 5호선을 검단까지 연장 ◦ 제3연륙교 조기 건설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	인천의 새로운 1백년 먹거리 발굴을 위해 청년창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시대 개막	◦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신성장동력기업 및 전략적 육성산업 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 - 송도 : 바이오, 교육, R&D, 문화·관광, MICE - 영종 : 복합관광, 복합물류, 항공클러스터, 드론 - 청라 : 로봇, AI, 제조부품, 국제업무, 관광유통 ◦ 계양테크노밸리 등 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 인천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개편 ◦ 유통·지원·R&D 집적시설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건립 ◦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예비창업 마을 '드림촌' 조성

〈표 5-2〉 인천광역시 민선7기 경제·산업 관련 주요 공약

구분	경제·산업 분야 주요사업
기반구축	◦ 인천-해주-개성을 연결하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 유치 - 송도 : 바이오, 교육, R&D, 문화·관광, MICE - 영종 : 복합관광, 복합물류, 항공클러스터, 드론 - 청라 : 로봇, AI, 제조부품, 국제업무, 관광유통 ◦ 계양테크노밸리 등 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 유통·지원·R&D 집적시설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건립
혁신환경	◦ 청년창업, 복합문화, 지역상권, 지역대학 등 맞춤형 원도심 혁신지구 지정 ◦ 인천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개편 ◦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예비창업 마을 '드림촌' 조성
기술개발	-
인력양성	-
기업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신성장동력기업 및 전략적 육성산업 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약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사업, 인기 있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사업의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

– u-IT클러스터, 로봇랜드,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글로벌대학캠퍼스 등 각종 공통기반시설의 효과적 조성 또는 운영방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일부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도 함.

– 또한, 전략업종별로 시험·검사·인증 등 공통기반시설을 확대·유치하고, 항공산업, 첨단자동차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지구별 맞춤형 기업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기업유치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전략산업별로 앵커 역할을 할 대기업이 매우 부족하고, 수직적 연계협력이 가능한 부품·소재 등의 중견·중소기업 유치도 확대되어야 함. 특정산업에 앵커기업이 임계규모에 달할 만큼 충분히 집적되어 있다면, 이들 수요를 토대로 연관 중견·중소기업은 자생적 집적이 가능할 것임.

– 금번 공약이 국내외 앵커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후반부로 접어든 현 상태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유치보다는 기업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산업별로 임계 규모에 도달할

수준까지 기업의 집적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산업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기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도 병행되어야 함.

○ 다만, 장기간에 걸쳐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산업이 변화해나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전략산업의 잦은 변경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예를 들어, 첨단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과 GM대우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음. 당장의 필요에 따라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목표로 전환한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음.

– 현재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략산업의 선정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한편, 상기 〈표 5-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사항에는 Bio-Medical Engineering-Creative Belt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Bio-Medical Engineering-Creative Belt 조성사업은 의료기관과 송도에 입지한 Bio&Medical 기업 및 남동공단의 기업, 인천내 대학교를 융합·연계하여 Bio-Medical 융합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이는 지역내 기존 바이오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계 활동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지역기업의 협력수준으로 볼 때 세심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예비창업 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창업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사한 사업을 숫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창업허브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제물포스마트타운, 송도SW융합클러스터 등 창업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유사한 사업을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장하거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단지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공약 가운데 '인천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개편' 사업에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 복지, 공원 등 복합 및 공공시설 개선,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수출지원, 기술지원, 정보화 지원 등 혁신환경 조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세부사업의 상당부분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과 재생사업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계획은 바람직하지만, 관련 재원의 확보와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현실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또한, 지역내 기업지원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사업을 고려하여, 시행방식을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업지원 사업들간 적절한 재원배분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동 공약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연 R&D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지역내 자체적인 R&D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독자적인 R&D 추진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산학연 협력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은 산학연 R&D를 통한 동기부여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R&D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R&D사업의 대부분을 국가 공모사업에 의존해왔고, 자체적인 추진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계획적인 투자확대는 재원의 낭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의 상용화 단계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R&D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적인 R&D 예산을 확보하고, 사전기획 및 평가, 관리 등 효율적인 R&D 추진을 위한 체계를 먼저 갖출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지역대학은 물론 글로벌대학캠퍼스의 해외대학과 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고, 연구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과학기술진흥협의회, 인천연구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등 관련 주체 간의 협력과 지역대학 및 전문가, 지역기업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

– 해외대학이 단순히 학생 등록금 수익을 위해 송도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천시도 유학생의 학비 절감만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캠퍼스를 조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대학캠퍼스의 활성화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지역의 8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역전략산업과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다만, 2016년 낮아지는 시중금리에 대응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식을 일부 변경하면서 기업의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면서도,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제도 검토와 더불어, 수요 대응적인 유연한 운영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문헌자료

강영주(2011), 대전 전략산업 육성의 성과와 과제, 대전발전연구원

김대중·김태진(2014),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충남 전략산업의 산업집적과 지역경쟁력간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3호

김영수·김선배·오형나(2007),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

류승한·서연미·이윤석(2013),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정책 방안, 국토교통부

박상옥·원유호·이주형(2013),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2018), 6대 전략산업의 특성, 서울연구원

유영성 외(2012),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연호·조택희(2014), 충북지역 산업구조와 전략산업 발전전략,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2008), 미래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지식경제부

정지원·최종화(2016),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정지원 외(2015),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인천광역시·인천발전연구원

조연술(2012), 지역 전략산업 지원정책의 평가와 개선, 호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지식경제부(2011), K-NANO 전략 2020, 지식경제부

부록 I 지역전략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매칭

1. 자동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 제조업	3012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2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2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2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9

2. 로봇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3. 바이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식료품 제조업	1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1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의약품 제조업	21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한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기타 제품 제조업	33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3999

4. 물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	자동차 제조업	301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2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	선박 건조업	3111	강선 건조업	31111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2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3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기타 선박 건조업	311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철도장비 제조업	3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1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202
운수업	H (49~5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도로 화물 운송업	493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1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수상 운송업	50	해상 운송업	501	외항 운송업	50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1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운송업	5012	내항 여객 운송업	50121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기타 해상 운송업	5013	기타 해상 운송업	501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보관 및 창고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10	일반 창고업	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
								농산물 창고업	52103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10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취급업	5294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1
								수상 화물 취급업	52942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68~6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69	운송장비 임대업	691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90

5. IT·SW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반도체 제조업	26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전자부품 제조업	262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1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2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	전자관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6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	컴퓨터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제조업	26321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3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329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제조업	C (10~3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제조업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4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전기장비 제조업	2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도매 및 소매업	G (45~47)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0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2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2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도매 및 소매업	G (45~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7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47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1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	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4782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821
				무점포 소매업	479	통신 판매업	4791	전자상거래업	47911
								기타 통신 판매업	479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58~63)	출판업	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통신업	61	전기통신업	612	유선통신업	6121	유선통신업	61210
						무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61220
						위성통신업	6123	위성통신업	61230
						기타 전기통신업	6129	통신 재판매업	61291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129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58~63)	정보 서비스업	6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자료 처리업	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	뉴스 제공업	6391	뉴스 제공업	63910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68~69)	임대업;부동산 제외	6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94~96)	수리업	95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1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5121

부록 II

「인천광역시 민선정부별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성과 분석」

응답자 기본 사항

직업유형	① 교수 ② 공무원 ③ 기업지원기관 ④ 기업지원기관연구기관
경제산업 분야 직무 경력	□ 2년 이하 □ 3~5년 □ 6~10년 □ 10년 이상

1. 민선정부별 전략산업 육성정책 평가

▣ 귀하는 과거 인천광역시 민선정부별로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산업정책의 5개 부문별로 예산(예산투입), 적정성(정책의 적시성, 과정의 합리성), 성과(직간접/장단기 성과)의 3개 측면에서 5점 만점에 몇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각각의 셀에 0~5점 사이의 점수를 직접 입력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민선3기 (2002~2006)				민선4기 (2006~2010)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기반구축	클러스터 조성, 공통 기반시설 구축, 기업유치 등								
혁신환경	산학연 협력, 혁신 네트워킹								
기술개발	R&D 투자, R&D 성과(기술상용화, 특허, 논문 등)								
인력양성	대학 및 전문대학, 직업교육, 사내교육 등								
기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혜택, 수출지원 등								

구분	내용	민선5기 (2010~2014)				민선6기 (2014~2017)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예산	적정성	성과	평균
기반구축	클러스터 조성, 공통 기반시설 구축, 기업유치 등								
혁신환경	산학연 협력, 혁신 네트워킹								
기술개발	R&D 투자, R&D 성과(기술상용화, 특허, 논문 등)								
인력양성	대학 및 전문대학, 직업교육, 사내교육 등								
기업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혜택, 수출지원 등								

2018년도 기획연구과제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전략산업육성 분야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18년 9월 30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032디자인(주)

ISBN 978-89-5678-753-4 9335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